

EU Brief

| EU 동향 |

-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신속성과 함께 회원국 간 연대도 중요
Eurozone members' solidarity and their speedy actions are required to overcome this fiscal crisis
- 정부채권 신용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Dangers of relying on Credit rating agencies and possible alternatives
- 정치문화와 리더십 부재가 키운 이탈리아 재정위기
Lack of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Italy and the fiscal crisis
- 한-EU FTA 발효 후 2개월간의 교역 실적 및 평가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TA: Effects in the first two months
- 재정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유럽은행들
Fiscal crisis and the banking industry in the EU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신속성과 함께 회원국 간 연대도 중요 002
Eurozone members' solidarity and their speedy actions are required to overcome this fiscal crisis



EU Economy

- 정부채권 신용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004
Dangers of relying on Credit rating agencies and possible alternatives



EU Politics

- 정치문화와 리더십 부재가 키운 이탈리아 재정위기 010
Lack of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Italy and the fiscal crisis



Trade & Investment

- 한-EU FTA 발효 후 2개월간의 교역 실적 및 평가 015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TA: Effects in the first two months



Industry Trends

- 재정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유럽은행들 020
Fiscal crisis and the banking industry in the EU



EU Law

- EU 법제도 개혁의 함의 026
The meaning of reforming the EU's legal institutions



Social Issues

- 상생의 관점에서 본 EU-러시아 가스관 분쟁 030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Russia: Gas pipe conflict



Report Review

- 유로화의 현재 위기는 재정동맹의 기회 035
Now is the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eurozone fiscal integration



EU Centre news

- 제12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The 12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037
우수 논문 장학증서 전달식 Outstanding Dissertation Award 038
EU 아카데미 출범 Launching of the EU Academy 039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 탐방 보고회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briefing session 040
EU SME 포럼 EU SME Forum 041

특별 기고

- 유럽사법재판소와 EU 집행위원회 통상 총국 042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하나의 유럽! 하나의 문화? - EU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 045
EU's cultural policies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신속성과 함께 회원국 간 연대도 중요

Eurozone members' solidarity and their speedy actions are required to overcome this fiscal crisis

유로지역은 현재 '경제(경기침체)', '재정(국가채무)', '금융(은행부실)'에서 위기에 직면해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로 발전해 유럽 금융위기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은행부실 확대에 의한 금융불안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마저 냉각되고 있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예기치 않은 디폴트(이를 '무질서한 디폴트'라고 부른다) 선언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의 확산은 세계경제를 한 번 더 수렁으로 내몰 수 있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럽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시장과 정부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austerity)과 더불어 신속성(speed)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능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재정위기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가이스너 재무장관도 유럽 지도자들이 위기에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이를 인정했다.

회원국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위기에 대응하는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장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21일에 합의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실질대출 한도를 4,400억 유로로 늘리고, 기금의 역할도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선제적인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17개국의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어느 한 국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더

불어 위기의 불길을 잡는 데 나서야 하는 EFSF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구 500만 명에 불과한 슬로바키아의 결정에 유로지역, 더 나아가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EU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¹

최근 들어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수시로 회동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유로지역의 현행 거버넌스 시스템하에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앞장서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속성을 강조하다보니 연대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강대국 중심의 위기대응이 자칫 비(非)유로지역 국가와 약소국들을 차별해 EU 차원의 연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위기 타개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모색하다 보니 유로지역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연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 경우 EU가 유로지역과 비유로지역 두 그룹으로 나뉘는 구도(Two-speed Europe)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U 기구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 중심의 위기 대응이 가져다줄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벨기에 베르호프스타트 총리 등 통합론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유럽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지역의 재정통합이 강화되면, 비유로지역과의 관계 설정이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¹ 다행히 슬로바키아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10월 14일 재투표를 통해 승인하였다.

The eurozone is facing multifaceted economic, fiscal and financial cris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risis in peripheral countries began and it was followed by a near default of Greece. This is having a strong effect in the financial market as European banks holding sovereign bonds of weak eurozone members are regarded as vulnerable. The instability in the market has also led to credit constraints and it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 economy. If Greece defaults (i.e. a disorderly default) and the crisis spreads to other countries,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ill be extremely destructive. This i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s the problem of Greece as a significant threat.

The fiscal crisis has created a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s. The investors are demanding European leaders to act swiftly and to adopt tough austerity measures but the rise in market volatility shows that investors are not sure about governments' efforts. 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decisions made by a sovereign nation need to be made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and as a result they cannot act as quickly as the investors wish them to do. Many experts have criticised that the eurozone leaders should act more boldly otherwise the problem will be exacerbated as it has until now. The US President Obama and Treasury Secretary Geithner have recently criticised European leaders for their slow act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Barroso has also agreed on this point.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which requires all 17 individual member states to permit the rescue package has been acting as an obstacle to the eurozone. For example, the member states decided to expand the firepower of the EFSF to 440 billion euros and to enable the fund to

support bank recapitalization and to purchase sovereign bonds on the 21st of July. However, the implementation has been delayed as the member states' parliaments had to vote on the plan. Even if one country rejected the plan, the EFSF would not have been enhanced.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eurozone relied on the decision made by the parliament of Slovakia, which has a population of only 5 million at one point.

Leaders from Germany and France are frequently holding meetings to discuss on the solutions to the fiscal crisis. It is inevitable that some countries will have to take the burden and lead the economy out of misery. However, some are criticising that the EU's decisions centred around the views of strong nations will hurt their unity and that it will lead to a "two-speed Europe." Reflecting this view, President Barroso continues to emphasise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hould be centralised by giving more power to EU institutions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ance system. Many experts view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the EU to strengthen its integration process. However, the EU will face another challenge of sort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zone countries and non-eurozone countries when this fiscal crisis is over. ★



정부채권 신용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Dangers of relying on Credit rating agencies and possible alternatives

As the fiscal crisis in peripheral European countries continues to threaten the financial market, credit rating agencies have downgraded profligate eurozone members' credit ratings. Three major agencies, namely Standard & Poor's, Moody's Investors Service and Fitch Group assign credit ratings for issuers of debt obligations by evaluating the level of their capacity and willingness to redeem their duty. These rating agencies have continuously been criticised for their lack of consistency. By analysing past incidences, it seems that they have enthusiastically downgraded the sovereign debt of a country whose economic conditions were worsening at the time, which resulted in aggravating the economic downturn. In other words, the rating agencies often failed to successfully assess the level of vulnerability before the economic crises. Using credit default swaps (CDS) or the results of the OECD's country credit risk assessment are possible alternatives, but there also remain shortfalls in these options.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럽 경제권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2009년 말부터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는데, EU의 금융지원이 지연되면서 재정위기가 유럽 경제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4월 이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2010년 11월 이후에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제위기 확산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유럽 경제권의 최대 경제 이슈로 부상했다.

2011년 8월 5일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이하 S&P)가 미국의 정부채권¹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²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를 보였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의 더블딥(이중침체)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여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 8월 이후에는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는 유로지역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

그리스 신용등급 지속 하락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ies: CRA)은 남유럽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11년 8월 S&P가 미국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AAA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도 현 수준의 평가등급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재정 및 채무 관리 수준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채권 신용등급도 현 수준에서 더욱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인 그리스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말 이후 계속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S&P는 2009년 12월 16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010년 4월 27일에는 BB+로 세 단계나 하향 조정했다. S&P는 그리스 금융산업이 여전히 취약해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P는 2011년 3월, 그리스 정부의 채무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했고, 5월 9일에는 B, 6월 13일에는 CCC로 하향 조정했다. 2011년 7월 21일, EU와 IMF의 주도로 그리스에 대한 민간채권단의 2차 구제금융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7월 27일 CC로 재차 하향 조정하여 디폴트 직전 단계로 평가하는 등 2011년 들어 4차례에 걸쳐 총 9단계나 강등했다.³

무디스(Moody's)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12월 22일에 A1에서 A2로, 2010년 4월 22일에는 A3로, 6월 14일에는 Ba1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2011년 3월 7일에 B1, 6월 1일에는 Caa1로 하향 조정하였다. 2차 구제금융 합의 이후인 2011년 7월 25일에는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Ca로 추가 하향 조정하였다. 무디스는 그리스가 경제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며,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채무조정 없이는 정부채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EU, IMF 등이 민간투자자들의 채무조정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⁴

피치(Fitch)는 2011년 5월 20일,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3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채무상환능력과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구조적 개혁을 이행하는 그리스 정부의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그리스 정부가 채무조정이나 자발적인 만기연장 등을 하면 디폴트로 간주하여 B+ 등급에서 디폴트 수준으로 추가 하향할 계획이라며 그리스를 사실상의 국가부도 상태로 평가했다. 피치는 유로지역의 그리스 지원방안 지연, 그리스의 거시경제 전망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13일, 또다시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

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민간채권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그리스를 디폴트에 준하는 상태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정부채권 신용등급 변동추이 (2009.1 ~2011.10)

	S&P	Moody's	Fitch
그리스	• A(2009.1.9) • A-(2009.1.14) • BBB+(2009.12.16) • BB+(2010.4.27) • BB-(2011.3.29) • B(2011.5.9) • CCC(2011.6.13) • CC(2011.7.27)	• A2(2009.12.22) • A3(2010.4.22) • Ba1(2010.6.14) • B1(2011.3.7) • Caa1(2011.6.1) • Ca(2011.7.25)	• A(2009.5.12) • A-(2009.10.22) • BBB+(2009.12.8) • BBB-(2010.4.9) • BB+(2011.1.14) • B+(2011.5.20) • CCC(2011.7.13)
포르투갈	• AA-(2009.1.13) • A+(2009.1.21) • A-(2010.4.27) • BBB(2011.3.24) • BBB-(2011.3.29)	• A1(2010.7.13) • A3(2011.3.15) • Baa1(2011.4.5) • Ba2(2011.7.5)	• AA(2009.9.3) • AA-(2010.3.24) • A+(2010.12.23) • A-(2011.3.24) • BBB-(2011.4.1)
스페인	• AAA(2009.1.12) • AA+(2009.1.19) • AA(2010.4.28) • AA-(2011.10.14)	• Aa1(2010.9.30) • Aa2(2011.3.10)	• AA+(2010.5.28) • AA-(2011.10.7)
이탈리아	• A+(2011.5.20) • A(2011.9.19)	• Aa2(2002.5.15) • A2(2011.10.4)	• AA-(2006.10.19) • A+(2011.10.7)

주: 푸른색으로 표기된 신용등급은 투기적(speculative) 수준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기타 남유럽 국가의 신용등급도 부정적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그리스 이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P는 2011년 3월 24일,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포르투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신뢰가 저하되어 외채상환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월 29일 BBB-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2011년 4월 5일, A3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포르투갈 정부의 단기자금 조달비용

¹ 흔히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분류하면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보다는 정부채권 신용등급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며, 국가 부도보다는 정부 채무불이행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도 국가위험(Country Risk)과 정부위험(Sovereign Risk)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채권 신용위험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²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1941년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2011년 8월 5일 기준, S&P가 AAA 등급으로 평가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총 15개국이며, 미국은 벨기에와 동일한 등급이다.

³ 과거 경험상 CCC 등급인 국가의 채무조정은 자발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채권단의 자발적인 채권교환이 발생해도 S&P는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SD) 수준으로 간주한다.

⁴ 무디스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채권단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채무차환(rollover)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으며,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내 0.1%, 10년 이내 1% 미만인 경우이고, B등급은 5년 이내 28%, 10년 이내 40%인 것으로 해석된다. 무디스의 평가방법은 채권발행 주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자본유입 수준·예상 등을 기초로 외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당해 정부의 외환유동성 상황,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부합 정도, 정부의 재정운용능력, 정부정책의 실패와 효과 등이 있다.

위기를 키우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식

남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 S&P, 무디스 등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은 경제상황이 악화된 국가에 대해 과도하게 등급 하향 조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위기를 더욱 조장했다.

예를 들면, 2009년 10월에 실시된 그리스 총선 당시 S&P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로 평가했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재정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S&P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12월에 또다시 BBB+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스 정부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 의회는 2011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재정긴축안을 의결했으나, 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디폴트 수준인 CCC로 추가 강등했다. 이는 그리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상황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디스도 마찬가지다. 2009년 말 남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후부터 2011년 7월까지 무디스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2에서 Ca로 무려 10단계나 하향 조정했다.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시의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실패했고, 과도한 등급 하향 조정으로 위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이 경제위기 발발

이전에 평가대상국 정부의 채무상환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평가요소는 너무 다양한 경제지표⁹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가능한 많은 분석대상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의 안정성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지만, 평가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이후의 남유럽 재정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재정수지 상황과 정부채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표가 전체 평가요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S&P, 무디스 등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이 적기에 충분한 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없어 여러 번에 걸쳐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있었다.

경제위기 상황과 핵심요인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주요 평가요소 위주의 평가방식이 평가 정직성을 완화하고 평가 정합성을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역내에서도 유럽 내 금융(감독)기관 등이 주도하는 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적 신용평가 방법과 그 한계

그렇다면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대신하여 국가위험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 즉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리변수(proxy variables)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은 있는가? 현재 국가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대안으로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¹⁰를 고려할 수 있다.

⁹ 신용평가기관별로 상이하나 S&P, 무디스는 45~50개의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Economist의 자회사인 EIU는 75~80개의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¹⁰ CDS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정부채권 부도 시 손실을 보상할 경우 당해 손실보상 정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7월 5일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Ba2로 4단계 하향 조정했다. 포르투갈은 재정지출 축소, 조세 인상, 금융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고, EU 및 IMF와 합의한 재정수지 적자 감축, 채무 안정화 등이 어려워 추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무디스는 분석하고 있다. 피치도 2011년 3월과 4월에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각각 A-, BBB-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201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스페인에 대해 S&P는 AA-,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 대해 S&P는 A, 무디스는 A2, 피치는 A+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 9월 19일 S&P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이탈리아의 경제성장이 부진하며 생산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의지가 취약한 탓에 경제개혁 추진 및 재정수지 관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무디스는 2011년 10월 4일,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 경제가 성장 부진, 과중한 정부채무 부담 등으로 2009년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구조적 취약성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정부채권 신용평가 방식

흔히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일컬어지는 S&P, 무디스 및 피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정부의 채무상환 능력(capacity)과 의지(willingness)를 측정한다.⁵ 이들 기관의 평가결과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 정부의 자금차입 조달금리(spread)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⁵ S&P는 이를 “an assessment of each governm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service its debt in full and on time”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S&P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25개국의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에 대한 위험수준을 평가하면서 해당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과 의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S&P의 평가방법(method)은 정량(quantitative) 및 정성(qualitative)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는 경제정책 성과, 우발채무 및 정치변화 등에 대한 질적 분석이며, 정량평가는 평가요소 중 지수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분석이다. 즉, 정량평가에서 외환보유액 대비 금융차입요구액⁶ 비율이 100%를 초과하거나 정성평가에서 관계법령의 경직성, 예산 부족 등으로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미흡한 국가는 투기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S&P는 정성분석 위험지표에 대해 최고 1에서 최저 6으로 분류한 다음,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전망치와 더불어 22개의 단계로 분류한다.⁷

1949년부터 정부채권 신용등급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무디스는 외화표시 장기채권 발행정부의 디폴트 가능성과 금융손실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110개국 내외이고, 국가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의 평가등급은 21개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⁸ 등급별 디폴트 가능성을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Aaa는 5년

⁶ 경상수지 적자, 비거주자 단기부채 및 중장기 만기도래 외채 포함.

⁷ S&P는 장기채 등급을 AAA(extremely strong capacity) AA+, AA(very strong), AA-, A+, A(strong), A-, BBB+, BBB(adequate), BBB-, BB+, BB(could be faced with inadequate capacity), BB-, B+, B(same as BB but still more vulnerable), B-, CCC+, CCC(currently vulnerable), CCC-, CC(highly vulnerable), SD(Selective Default), D(default)로 분류하고 있으며 BB+ 이하는 투기등급(speculative cohort)이라고 분류한다. 전망치(1989년 도입)는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안정적(Stable, not likely to change), 유흥적(Developing, Positive or Negative), 의미 없음(Not Meaningful)으로 분류한다.

⁸ 무디스의 장기채 등급은 Aaa(best quality), Aa1, Aa2(high quality), Aa3, A1, A2(strong payment capacity), A3, Baa1, Baa2(adequate payment capacity), Baa3, Ba1(moderate protection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s), Ba2, Ba3, B1, B2(small assurance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s), B3, Caa1, Caa2(likely to be or already in default), Caa3, Ca, C(lowest rated class of bonds and typically in default or other market shortcom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등급(speculative grading ratings)은 Ba1 이하다.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1년 7월 5일, 무디스가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EU는 재정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EU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치라며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을 비판했다. 바호주(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2011년 7월, 신용평가기관의 과도한 등급 하향 조정 등에 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은 신용평가기관들의 편향된 반유럽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용평가기관들에 맞서 유럽이 독자적인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독일 재무장관도 신용평가기관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근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조정은 시의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신용등급을 거듭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위기를 더욱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간 내 신용평가의 급격한 변동은 자본 및 외환 시장의 불안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P, 무디스 등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은 평가 내역을 보다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경제위기국의 디폴트 위험 예측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현행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이 소득수준별, 국제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평가지표에 근거해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이 향후에도 적절한 평가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설립해 경제위기 예측, 극복 및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국가위험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남유럽 재정위기 사례는 경제위기국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조양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유럽팀장

Assessment Model: CREAM) 결과를 토대로 국가 신용위험 평가전문가(Country Risk Experts: CRE) 회의를 거쳐 국가신용위험을 결정한다.

OECD의 정량평가는 ECA의 수출신용 거래관계, 평가대상국의 외채상황, 거시경제상황, 체제전환경제 및 EU 가입여부 등의 평가요소를 반영한다. 이들 평가요소(개별변수)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관계(확률분포)를 고려하여 평가대상국별 종합평점을 산출한다. OECD는 도출된 CREAM의 종합평점에 따라 평가대상국(135개국 내외)을 8개의 모델 등급(0~7등급)으로 분류한다.¹² OECD의 평가방식은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ECA의 국가신용위험 평가전문가가 참가하여 평가대상국별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단일기관)의 자의적인 평가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OECD 평가방식은 정기평가 위주여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해도 수시로 국가위험 수준을 재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적절하지 않은 신용평가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조장

최근 EU는 신용평가기관의 과도한 등급조정이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빈번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위험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이 대부분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럽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S 프리미엄은 정부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대변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다. 즉,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국가위험이 증가하여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최근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거래량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CDS 프리미엄은 국가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예를 들면,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왔으며, 그 결과 CDS 프리미엄도 급상승했다. 그리스는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2008년 50bp 수준에서 2011년 9월에는 3,500bp 수준으로 급등했다. 그러나 CDS 프리미엄 상승 정도만큼 국가위험 수준이 비례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없다.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기적 거래로 인해 실제 정부채권 신용등급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즉, CDS 프리미엄 등락을 국가위험 평가의 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위험 평가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OECD의 평가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결과 및 그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은 1998년부터 OECD 수출신용회의에서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BIS의 자본적합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기초적 자료로서 OECD의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S&P, 무디스 등은 민간 평가기관으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OECD는 공적 평가기관으로서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신용보험과 같은 수출신용 시장에서 적용되는 최저 프리미엄 요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¹ OECD의 평가방식은 정량평가(CRAM)와 정성평가(CRE 회의)를 혼용하고 있다. OECD는 이들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평가대상국에 대한 국가위험 평가모델(Country Risk

¹¹ 1997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그룹이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프리미엄 적용지침(Knaepen Package)"에 합의함에 따라 OECD 수출신용기관(ECA)은 수출신용 프리미엄(보험료, 보증료 및 대외위험수수료)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최저 프리미엄요율(Minimum Premium Rate: 이하 MPR)은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998년부터 OECD 무역국 수출신용과가 주관하는 국가신용위험 평가전문가(CRE) 회의를 통해 MPR이 결정된다.

¹² OECD CREAM에서 종합평점(Total Risk Score)에 따른 모델 등급(Risk Category) 산출결과를 비교하면, 0~9%는 0등급(OECD 및 유로지역 고소득국 수준), 10~19%는 1등급, 20~34%는 2등급, 35~49%는 3등급, 50~64%는 4등급, 65~79%는 5등급, 80~89%는 6등급, 90~100%는 7등급(디폴트 수준)이다.



정치문화와 리더십 부재가 키운 이탈리아 재정위기

Lack of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Italy and the fiscal crisis

The main causes for the fiscal crisis in Italy are generous welfare payments, inefficient institutions and its backward industrial structure. These weaknesses have been caused by lack of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Italy. Prime Minister Berlusconi's lack of credibility and his numerous personal scandals are behind the recent increase in financial market vulnerability. Also, he has openly challenged the Finance Minister's various reform plans and he has disappointed the Italian people when he tried to provide various government supports to his own companies. The political culture in Italy is also backward where politicians get their votes for their populist welfare policies. Also, Italy's complex government coalition limits politicians' ability to drive reform policies. Italy's economy will continue to be vulnerable, even it strengthens its deficit plans by raising taxes or state job cuts, as long as there is no change in its political institutions.

유로지역 위기의 화약고인 이탈리아

유로지역 위기로 떠들썩한 요즘 이탈리아의 주요 광장과 거리는 연일 성난 시위대와 그들의 확성기 소리로 뒤덮여 있다. 여름휴가 동안 잠시 주춤했던 노동자들의 시위는 이탈리아 정부가 7월에 이어 9월 14일 추가적인 재정감축안을 통과시키면서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은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유로지역 위기를 가져왔으면서도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탈리아의 향후 전망을 우려하면서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무디스(Moody's)마저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세 단계 하락한 A2로 재조정했다. 즉, 이탈리아의 재정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1조 9,000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국가부채와 이를 해결할 이탈리아 정부의 능력 부재다.

지난 9월 말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를 승인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게다가 7월 이후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주변국의 증시에도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이탈리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

리와 트레몬티(Giulio Tremonti) 재무장관의 스캔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불화는 위기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진퇴양난에 놓인 이탈리아 경제

사실 이탈리아의 위기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약 1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로지역 국가의 부채 기준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부채 액수는 2011년 현재 약 1조 9000억 유로이며, 이는 나머지 PIIGS 국가의 부채를 합한 것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특히, 이탈리아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1,200억 유로나 되고, 5년 안에 약 9,000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이고 있지만 그 양이 매우 미미하고, 현재 이탈리아의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이탈리아가 이를 갚을 능력은 요원해 보인다.

이탈리아는 유로지역 제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최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2010년 경제성장률이 약 1.3%에 그쳤으며, 2011년에는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재정적자 규모 또한 GDP 대비 -4.6%로 부채가 계속 쌓여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제 투기 세력이 이탈리아를 공격한다면 유럽재정안정기금으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독일의 지원으로 이 기금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이탈리아를

★ 외채위기 전후 이탈리아 인플레이션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수지(GDP 대비 %)	- 1.5	- 2.7	- 5.4	- 4.6	- 4.0	- 3.2
국가채무(GDP 대비 %)	103.6	106.3	116.1	119.0	120.3	119.8
실질성장률(전년 대비 %)	1.4	1.4	5.2	1.2	1.1	1.6
실업률(%)	6.1	6.8	7.8	8.4	8.4	8.1

자료: 기획재정부

구해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탈리아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채 비중이 GDP의 12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이 중 75% 이상을 이탈리아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채무상환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재정적자 또한 -4.6%로 유로지역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EU 27개국의 평균 재정적자는 -6.4%이고, 유로지역의 평균 재정적자는 -6.0%다. 게다가 금융기관과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며, 실업률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위기론은 헤지펀드 등 국제 투기세력이 조장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재정위기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PIIGS에서 'I' (이탈리아)를 빼고 PIGS로 부르는 등 이탈리아 위기설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그리스 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이후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EU 회원국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공무원 급여동결,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 의료서비스 비용 인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총 480억 유로를 감축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0.2%로 낮추겠다는 재정감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9월에는 재정감축 계획을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율과 여성근로자의 은퇴연령을 올려 총

542억 유로를 감축하기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의 교회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가능성까지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뒤에 감춰진 부채와 제도의 비효율성

그렇다면 이탈리아 재정위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위기의 근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연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왔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55세에 은퇴해도 직전 임금의 약 80%를 바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은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고, 65세가 되어 은퇴하면(여자는 60세) 직전 임금의 70%를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연금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복지비용은 더욱 증가했다. 문제는 이탈리아 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높은 복지비용을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낮은 성장률 때문에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는 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탈세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다. 마피아 등 범죄단체가 운영하는 경제 규모가





★ PIIGS 국가들의 재정 및 부채 현황

국가	내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U(27개국)	GDP(백만 유로)	12,398,52	12,494,35	11,788,04	12,280,64
	재정적자(GDP 대비 %)	-0.9	-2.4	-6.8	-6.4
	정부지출(GDP 대비 %)	45.6	46.9	50.8	50.3
	정부수입(GDP 대비 %)	44.8	44.6	44.0	44.0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7,310,759 59.0	7,782,775 62.3	8,768,748 74.4	9,828,232 80.0
유로지역(17개국)	GDP(백만 유로)	9,035,939	9,264,270	8,970,953	9,204,316
	재정적자(GDP 대비 %)	-0.7	-2.0	-6.3	-6.0
	정부지출(GDP 대비 %)	45.9	46.9	50.8	50.4
	정부수입(GDP 대비 %)	45.2	44.8	44.5	44.4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5,984,848 66.2	6,472,881 69.9	7,116,276 79.3	7,837,207 85.1
아일랜드	GDP(백만 유로)	189,374	179,989	159,645	153,939
	재정적자(GDP 대비 %)	0.1	-7.3	-14.3	-32.4
	정부지출(GDP 대비 %)	36.7	42.8	48.2	67.0
	정부수입(GDP 대비 %)	36.8	35.5	33.9	34.6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47,361 25.0	79,837 44.4	104,782 65.6	148,074 96.2
그리스	GDP(백만 유로)	227,074	236,917	235,017	230,173
	재정적자(GDP 대비 %)	-6.4	-9.8	-15.4	-10.5
	정부지출(GDP 대비 %)	46.6	47.9	52.9	49.5
	정부수입(GDP 대비 %)	40.0	39.9	37.3	39.1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239,364 105.4	262,318 110.7	298,706 127.1	328,588 142.8
스페인	GDP(백만 유로)	1,053,537	1,088,124	1,053,914	1,062,591
	재정적자(GDP 대비 %)	1.9	-4.2	-11.1	-9.2
	정부지출(GDP 대비 %)	39.2	41.3	45.8	45.0
	정부수입(GDP 대비 %)	41.1	37.1	34.7	35.7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380,661 36.1	433,611 39.8	561,319 53.3	638,767 60.1
이탈리아	GDP(백만 유로)	1,546,177	1,567,761	1,519,702	1,548,816
	재정적자(GDP 대비 %)	-1.5	-2.7	-5.4	-4.6
	정부지출(GDP 대비 %)	47.9	48.8	51.8	50.5
	정부수입(GDP 대비 %)	46.4	46.1	46.5	46.0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1,602,115 103.6	1,666,603 106.3	1,763,864 116.1	1,843,015 119.0
포르투갈	GDP(백만 유로)	169,319	171,983	168,610	172,546
	재정적자(GDP 대비 %)	-3.1	-3.5	-10.1	-9.1
	정부지출(GDP 대비 %)	44.4	44.7	49.8	50.7
	정부수입(GDP 대비 %)	41.1	41.1	39.7	41.5
	정부부채(백만 유로) (GDP 대비 %)	115,587 68.3	123,108 71.6	139,945 83.0	160,470 93.0

자료: Eurostat

매우 크고, 불법이민자 등 노동시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 비율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복지제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체제 역시 시스템 부재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0.2%에 불과했고, 고용 수준이 악화되면서 남북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이탈리아를 10년 뒤로 후퇴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저성장과 남북 간의 격차는 1980년대 이래로 침체된 경제체제를 적절한 개혁 없이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경제구조 문제 역시 심각하다. 최근 이탈리아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은 섬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이지 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가 아니다. 이탈리아의 신기술 투자는 GDP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동을 겪었지만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위기를 키위

최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지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무능력과 경박한 행실을 이탈리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역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불투명한 경제성장 전망과 연약한 연립정부, 집권 정당 간의 정책 불일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듯 이탈리아 재정위기는 정치권과 총리의 리더십 부재에 책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정치를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탈세와 뇌물공여로 법정에 서기까지 하였다. 최근에는 미성년 댄서와의 성매매 문제까지 불거져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더구나 2011년 지방선거와 원자력 발전 재도입 문제를 두고 치러진 국

민투표에서 잇달아 패배함으로써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실망스럽다. 2011년 초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긴축안을 제안했는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여기에 자기 소유의 기업에 대한 특혜조항과 법인세 감축안을 포함시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 트레몬티 재무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를 비난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무장관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만만하더니 세금인상을 포함한 재정긴축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자신이 2001년 총선 당시 약속한 세금 감면과 연금지원 확대라는 ‘이탈리아인들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의 이탈리아 국민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는 2013년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근본적인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문제점

리더십의 부재와 현재의 재정위기는 분명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또 다른 책임자가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뿌리깊이 박혀온 정치문화 등 구조적 문제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에서 정치와 시민의 관계는 때때로 ‘주고받는(give and take)’의 관계다. 즉,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많은 호혜를 베풀고, 국민은 투표에서 표를 통해서 보답한다. 후견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시스템은 이탈리아가 어떻게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집권당은 좌파든 우파든 그동안 재정적자의 주범인 복지문제를 건드린 적이 없다. 1994년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사임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2001년에 세금 인하와 연금 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것은 이러한 교환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정치제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탈리아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연정을 통해서 정부를 구



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정은 구성원 간의 견해 차이로 자주 붕괴된다. 현재의 정부 또한 매우 연약한 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추진된 재정긴축안에 포함된 부유세나 세금인상 문제는 부유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정의 구성원인 ‘북부동맹’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이러한 정치계급의 무능과 당파싸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경제에 희망은 있는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142개 국가 중 43위를 차지했다. 이 중 제도와 거시경제환경은 각각 88위와 92위를 차지할 정도로 취약하다. 향후 경제성장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제2차 재정긴축안 역시 실행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긴축안에는 행정제도 개혁이나 의원 수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경제환경, 정치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세금 인상이나 공무원 수 축소와 같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전략만을 가지고는 이탈리아 경제의 취약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탈리아는 주변국들이 왜 이탈리아를 ‘유럽의 병자’라고 부르는지 깨달아야 한다. ★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현대경제연구원 EU 센터 부소장

한-EU FTA 발효 후 2개월간의 교역 실적 및 평가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TA: Effects in the first two months

The Korea-EU FTA was ratified on the 1st of July, 2011 and some trade data have been released which enable us to look into the initial effects of the agreem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act of the FTA on individual products with the largest tariff deductions by looking at the growth rates of exports and imports. In terms of exports, the largest increase is found in automobiles. Exports of products such as apparels and clothes, leather bags and dolls, hav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even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top 20 export products. The largest increase in imports is found in airplanes and their components and a dramatic increase is also found in meat imports. By looking at these figures, we can conclude that the future of the Korea-EU trade relations is bright. Even though Korea's total exports to the EU have declined somewhat as a result of the fiscal crisis and economic slowdown in Europe, exports of certain products are rising fast. Korean companies should raise the utilisation rate of the Korea-EU FTA in order to take the advantage of this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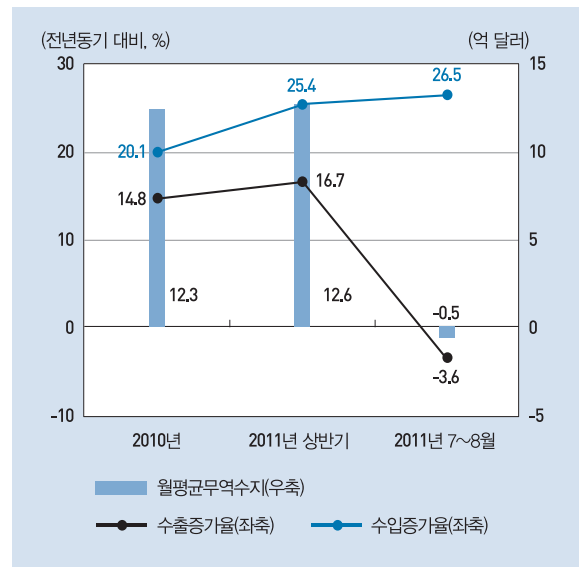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되고 2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다. FTA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한-EU FTA도 예외가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협상 및 비준 절차를 거쳐 마침내 잠정 발효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FTA로 과연 우리가 바라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쏠려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FTA의 전반적 성패를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위축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수요 위축이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지역의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수출도 7~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에 대한 수출이 23.7% 증가했고, 상반기 EU에 대한 수출이 16.7%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실로 큰 충격이다.¹

한편 한국의 경기도 2011년 3/4분기에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수입 증가율은 상반기 25.4%에서 7~8월에는 26.5%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

★ 한국의 대EU 교역 추이



자료: 무역협회, KITA.net

가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월평균 12억 달러를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하던 대EU 무역수지가 2011년 7~8월에는 월평균 5,000만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7월 2억 달러 적자, 8월 9,000만 달러 흑자)

이렇듯 FTA 발효 시점과 수요 충격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려, 전체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EU

¹ 이하 수출입 관련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토대로 작성



★ 2011년 7~8월 20대 품목 수출증가율

품목(MTI 3단위)	수출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전 세계	EU
전 품목	23.7	-3.6
자동차	26.4	122.8
자동차부품	29.0	23.6
석유제품	86.9	112.6
철강판	33.4	29.3
합성수지	24.3	34.8
컴퓨터	25.4	20.7
건설광산기계	30.1	41.4
고무제품	27.7	27.5
원동기 및 펌프	48.8	43.1
플라스틱 제품	18.5	21.0
정밀화학원료	60.5	29.7
금속공작기계	31.5	184.3
기계요소	35.3	40.5
계측제어분석기	25.0	66.8
철강관 및 철강선	32.2	84.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6.8	-55.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0	-46.0
무선통신기기	9.4	-30.3
반도체	-12.9	-43.0
영상기기	11.1	-18.6

주: 1) 음영 부분은 대EU 수출증가율이 전 품목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품목.
2) 음영 부분과 음영이 아닌 부분은 각각 2011년 1~8월 대EU 수출비중 順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FTA의 전반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FTA 발효로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했을 수 있고, 혹은 무역수지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효과를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인하율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의 수출입증가율을 파악하고, 한-EU FTA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하 관세인하 내용은 외교통상부 (20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장 눈에 띄는 수혜 품목은 자동차

먼저 수출 측면에서, 한-EU FTA의 가장 큰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FTA 발효 이전 EU에서 부과하던 10%의 관세가 3~5년에 걸쳐 철폐²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1.7~2.5%p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힘입어 2011년 7~8월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22.8% 증가했다. 수출 비중도 11.0%를 기록하여 선박(10.8%)을 제치고 대EU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U에 대한 수출이 3.6% 감소하는 상황에서 2배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도 놀랍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26.4%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성과다.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증대가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23.6% 증가했다. 자동차부품은 2.7~14%에 달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관세인하 효과가 큰 품목이다. 역시 눈에 띄는 선전(善戰)이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이 29.0% 증가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이는 완성차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함께 낮아지면서, 부품을 수출하여 EU 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완성차 수출이 부품 수출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4.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석유제품도 대표적인 수혜품목이다. 2011년 7~8월 석유제품의 전 세계 수출은 86.9%, EU 수출은 112.6% 증가했다. 이 중 상당부분은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단가상승분이었으나, EU 경기부진의 파고를 2배 이상의 수출증대로 뛰어넘은 데에는 FTA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대 품목 중에서는 금속공작기계,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철강관 및 철강선 등이 전 세계에 대한 수출보다 EU에 대한 수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철강제품은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기존 관세율이 0%거나 매우 낮아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철강관 연결재가 속한 분야 등에서는 수출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편 7월 이후 수출이 크게 둔화된 품목은 선박과 IT 제품들인데, 이러한 분야의 수출 둔화는 FTA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8월에 전년동기 대비 55.4%의 감소율을 보인 선박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서, 현재의 수출 실적은 2~3년 전의 수준 실적이다. 그러므로 최근 선박의 수출 부진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주 실적 부진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LCD, 핸드폰, 반도체 등 IT 제품들의 수출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관세의 변동보다는 자체적인 제품 사이클을 따르며, 특히 반도체와 LCD는 기존에 무관세 품목이어서 FTA의 효과가 없다. 2011년 하반기에 IT 제품시장은 지속적인 공급과잉 등으로 단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럽과 세계의 경기충격이 완화되고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면 선박이나 가전 분야에서도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부문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20대 수출품목에는 들지 못했지만 FTA의 혜택을 받은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섬유 및 의류(7~8월 EU에 대한 수출증가율 21.1%, 전 세계에 대한 수출증가율 12.1%), 가죽제 가방(EU 85.3%, 전 세계 47.8%), 인형(EU 192.9%, 전 세계 -42.7%) 등이 특히 눈에 띈다. 이들 품목은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이 주력품목으로 자리잡기 이전에 한국 수출을 앞장서서 이끌던 것이다. 여전히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흥국의 저임금에 밀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이들 산업에 한-EU FTA의 관세인하 효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공업은 현재 대부분의 수출 주력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어서, 대기업 및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위주인 최근 한국의 수출구조를 보다 균형잡힌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

★ 2011년 7~8월 20대 품목 수입증가율

품목(MTI 3단위)	수입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전 세계	EU
전 품목	26.9	26.5
자동차	25.9	29.7
기계요소	15.7	26.6
계측제어분석기	13.0	37.5
항공기 및 부품	81.8	1,116.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6.8	214.5
유선통신기기	49.6	293.0
정전기	16.7	72.9
석유제품	46.6	36.7
육류	87.4	170.4
섬유 및 화학기계	0.6	50.4
반도체 제조용 장비	-17.5	25.5
원동기 및 펌프	8.3	-5.6
농약 및 의약품	13.8	5.9
자동차부품	21.5	20.0
정밀화학원료	27.6	14.6
반도체	3.1	-11.5
기타 기계류	11.3	-8.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6.8	9.5
합성수지	15.8	15.3
전자응용기기	35.1	0.4

주: 1) 음영 부분은 대EU 수입증가율이 전 품목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품목.
2) 2011년 1~8월 대EU 수입비중 順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2011년 8월 한국에서 EU로 수출한 업체의 수는 6,607개로 2010년 8월의 6,491개보다 116개(1.8%) 증가했는데, 이 중 대기업이 19개, 중소기업이 97개 늘어나³ 한-EU FTA가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효과가 지속된다면 수출의 고용창출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수출단가를 인하하지 않은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EU 구매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⁴ 관세 인하의 무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3 관세청 (2011. 9. 7.). "8월 대EU 무역수지 흑자 달성", 보도자료.
4 조성대 (2011). "한·EU FTA 발효 이후 현지 우리 기업의 체감 효과 및 활용 사례" (Trade Focus. Vol. 10, No. 46). 국제무역연구원.





해, 향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항공기 부품, 삼겹살의 수입이 증대

그러면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역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이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2011년 7~8월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116.3% 증가하면서 수입비중도 상반기 1.8%에서 7~8월 5.8%로 뛰어올랐다. 항공기부품에 대한 3~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기존의 대기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8월의 수입비중 1위인 자동차도 7~8월의 수입이 29.7% 증가했다. 한국에서 적용하던 8%의 관세가 3~5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당분간 한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의 수입이 170.4%나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제역 파동 등으로 국내 육류 생산이 위축되면서 7~8월 전 세계로부터의 육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87.4%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유럽산 육류가 특히 많이 늘어났다. 25%에 달하던 냉동 삼겹살 및 기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가 5~10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향후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긍정적 효과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소비자물가의 안정인데, 육류 외에도 혼합분유(기존 관세 36%, 10년 철폐), 치즈(36%, 15년), 냉동 닭다리(20%, 10년) 등 유럽산 식품의 수입이 앞으로 국내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거의 전량 EU에서 수입하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기존 관세 20%, 3년간 철폐), 꼬냑(15%, 5년간) 등의 7~8월 수입증가율은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16.4%였던 스카치 위스키 수입(EU와 전 세계에 대한 수입증가율이 동일)이 7~8월에 10.0%로 반전된 것이다. 적포도주(상반기 4.8%→

7~8월 80.2%), 핑크모피(26.8%→76.3%) 등의 대 EU 수입증가율도 7월 1일 이후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은 한-EU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필요

결론적으로 FTA가 잠정 발효된 후 2개월간 한국과 EU의 교역자료를 살펴보면 한-EU FTA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재정위기의 충격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FTA의 혜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 수출자가 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EU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기업 중 8월 현재 인증 수출자는 40%에 불과하다. 둘째,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한국산 또는 EU산 부품소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역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한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커지면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증대로 수출의 과실이 더 많은 국내소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에서 보듯 부품소재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위험성이 크므로, EU산 부품소재를 이용해 공급사를 안정화도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관세청, 무역협회 등은 FTA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한-EU FTA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국 수출품이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

적인 예다. 또한 FTA 활용에 관한 컨설팅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한-EU FTA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출발점에서부터 선진국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둔화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FTA의 혜택

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재정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유럽은행들

Fiscal crisis and the banking industry in the EU

The economic situation in Europe is worsening and the probability of a Greek default has been rising fast. The EU leaders agreed to expand the firepower of the EFSF in July, but its positive effects were limited as the frictions between eurozone members were intensified ov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When the fiscal crisis started to spread to Italy and Spain, the ECB began to purchase their sovereign bonds to calm the financial market. Even with this effort, the market continued to view Italy as vulnerable with its political uncertainty and economic slowdown. In the third quarter of 2011, it was clear that the biggest victim of the crisis were the European banks. Their share prices had been halved since the beginning of 2011 and the credit rating agencies started to downgrade the ratings of major European banks. The problem does not just lie in the banks' holdings of sovereign bonds. The indirect effect of a rising credit constrain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al economy. Many experts have warned that European banks must be recapitalised, but many politicians initially denied the problem and they are once again slow in coming up with a solution. The European leaders should devise a plan to recapitalise their weak banks now rather than later, as well as dealing with the sovereign crisis.

유럽 재정위기 악화 지속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증폭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구제금융 지원국 세 곳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금융시장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7월에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에 합의하였으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금융시장을 실망시켰다. EFSF에 국채매입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통합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프랑스와 독일 간의 마찰이 심화되었고, 핀란드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며 EU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또한 7월에 합의한 EFSF 규모는 4,400억 유로인데, 이는 유로지역의 3위와 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위기에 빠질 경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EFSF가 약 2조~3조 유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8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며 시장이 잠시 안정되었으나 미국 발 악재로 유럽 금융시장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9월 초에는 EU, IMF, ECB로 구성된 그리스 경제 실사단(트로이카)이 그리스가 2011년에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내놓지 않으면 6차 지원금(80억 유로)을 지원

★ 2011년 3/4분기 유럽 재정위기 일지

일자	내용
7월	3대 신용평가사: 그리스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
8월 4일	ECB: 특별 유동성을 공급해 지속해서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
8월 8일	ECB: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
9월 2일	트로이카 실사단: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9월 7일	독일: 구제금융 참여 합헌 판결
9월 14일	무디스: 프랑스 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 강등
9월 15일	ECB: FED,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과 공조해 10월부터 유로지역 은행에 3개월 단위로 달러화를 무한정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
9월 20일	IMF: 2011년과 2012년 유로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1.6%와 1.1%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0.4%p와 0.6%p 하향 조정)
9월 20일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9월 21일	S&P: 이탈리아의 2위 은행 등 7개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9월 23일	무디스: 그리스 은행 여덟 곳의 신용등급 강등
9월 29일	독일: EFSF 확대안 국회 통과

자료: 각종 보도자료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9월 14일 5,047bps로 급증했는데, 이는 그리스가 향후 5년 안에 디폴트할 가능성이 98%라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 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유럽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지역

경제의 16.9%를 차지하는 3위 경제대국으로 이탈리아가 흔들릴 경우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스에 미치는 영향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가 뇌물 공여와 탈세 등 세 건의 소송에 관여되어 있어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S&P는 9월 20일에 이탈리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탈리아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의 국가채무가 2010년 기준 GDP 대비 119%에 달하고, IMF는 이탈리아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0.3%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채무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중순에 재정긴축안이 이탈리아 하원에서 통과되며 급한 불은 끈 상황이나 향후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정부에 대한 불신 확대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탈리아 경제와 유럽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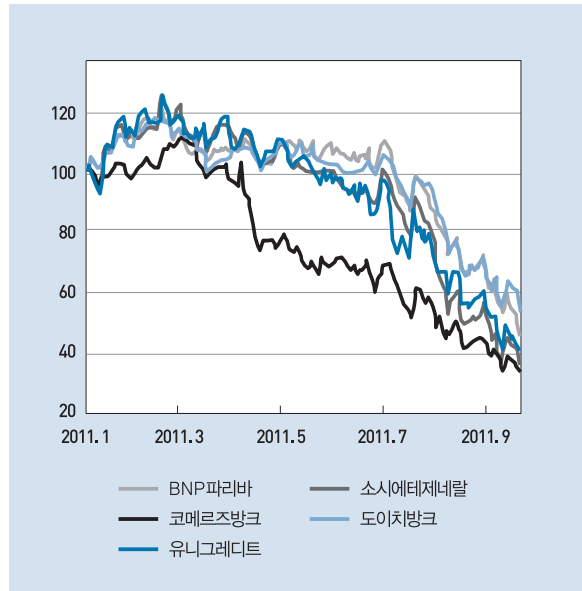
유럽은행들의 상황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럽의 은행들이다. 유로지역 주요 은행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 반 토막이 난 상황이고 CDS 프리미엄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9월 22일 기준 도이치뱅크(독일), 유니크레디트(이탈리아), 소시에테제네랄(프랑스)의 주가는 각각 연초 대비 53%, 59%, 63% 하락했다. 유럽은행들이 위기국(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를 상당 규모 보유하고 있어 위기국 상황이 악화되며 이들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월에 무디스는 프랑스의 2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3위 은행인 크레디트아그리콜레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지역 주요 은행들의 익스포저를 살펴보면 문제의 복잡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3월 말 기준 프랑스 은행의 PIIGS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6,717억 달러로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21%를 차지하고 있

★ 유럽 주요 은행 주가 변화

(2011년 1월 3일=100)



자료: Thomson Reuters, Dalastream.

다. 독일의 PIIGS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전체의 17%인 5,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CDS 프리미엄 수치를 살펴보면, 시장은 그리스 디폴트가 불가피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위기국 국채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민간채권단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은행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불어 유럽 내 은행들 간의 대출도 많아 위기국 상황이 심화되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아그리콜은 지난 6월 초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그리스의 엠포리키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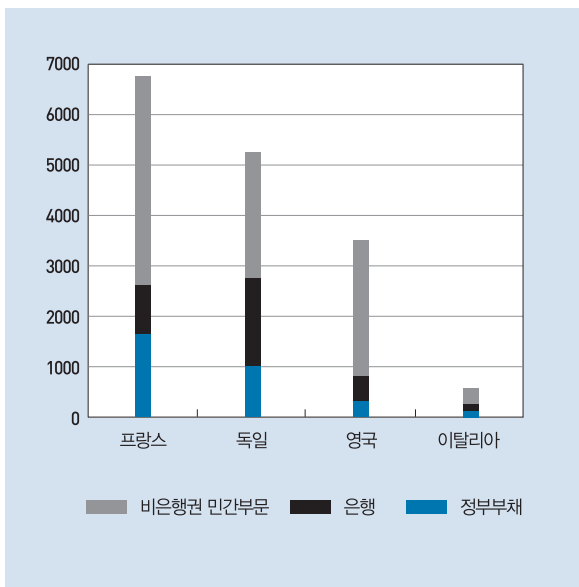
2011년 9월 말, 크리스티앙 누아예(Christian Noyer)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에 디폴트 상황이 발생해도 프랑스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누아예 총재가 그리스 국채 상각이라는 단편적인 현상만 고려한 채,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11년 3월 유럽 주요국 은행들의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억 달러)



주: 이탈리아의 PIIGS에 대한 익스포저는 이탈리아 국내 대출을 제외
 자료: BIS (2011),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 EURIBOR-OIS 스프레드

(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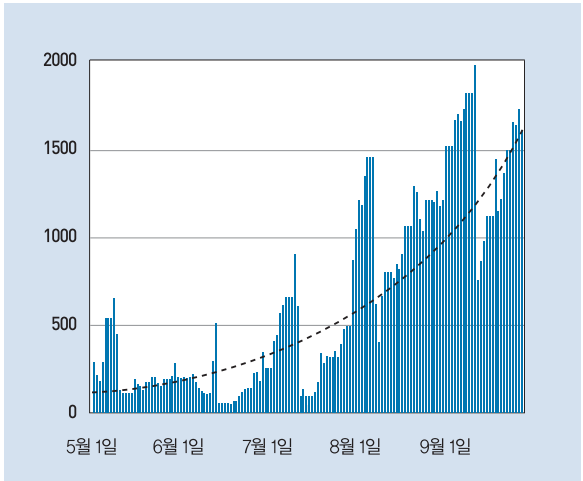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유럽은행권의 신용경색 발생

지난 5월 호세 마누엘 곤잘레스-파라모(Jose Manuel Gonzalez-Paramo) ECB 이사는 그리스가 채권채무

★ 2011년 유럽중앙은행 예치금

(억 유로)



자료: ECB

재조정을 하게 되면 리먼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상으로 정확한 피해규모를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된 9월에 이미 유럽시장에서는 신용경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은행 간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신용경색이 확산되고 있고, 유리보(EURIBOR) 3개월물(유로지역 은행 간 금리)과 OIS(초단기 대출금리)의 스프레드가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2011년 초까지 20bps대를 기록하던 EURIBOR-OIS 스프레드는 9월 초 80bps를 넘어섰다. 또한 미국 머니마켓펀드(MMF)가 유럽 금융권에서 자금을 회수해나가기 시작했다. 피치 조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0대 MMF 펀드자금의 유럽 은행 익스포저 비중은 2006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42.1%를 기록했고, 8월 MMF 자금의 유럽은행 익스포저 규모는 5월 말 이후 27% 하락한 2,8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ECB의 예치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되자 유럽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기보다 중앙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용경색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전조와 유사하다고 보는 분석가들이 있다. ECB는 금융시장의 자기실현적 위험을 막기 위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과 공조해 10월부터 유로지역 은행에 3개월 단위로 달러화를 무한정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유럽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럽은행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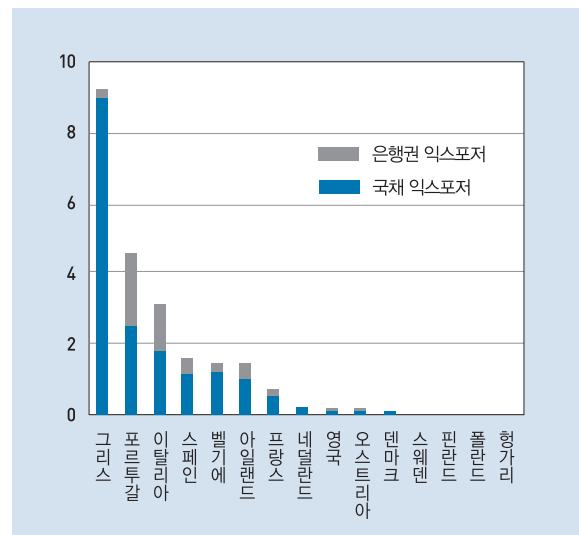
7월에 발표된 EU의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90개 대상 은행 가운데 여덟 곳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열여섯 곳은 핵심 자기자본비율이 5~6%로 향후 자본 확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차 테스트는 1차 테스트보다 더욱 강화된 시나리오를 적용했으나 위기국 채권의 채무탕감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아 시장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 Lagarde) IMF 총재는 8월 27일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연방준비은행 연례 심포지엄에서 유럽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행들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자본 확충에 나서야 재정위기와 낮은 경제 성장을 이겨낼 수 있고 전염효과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강제적 자본 확충으로 우선 민간자금을 유치해보고 필요하면 공적자금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유럽은행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9월 21일에 발표된 IMF의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F)」는 유럽은행이 재무건전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IMF는 2009년 말과 2011년 9월 사이 유럽 재정위기가 EU 은행권에 미친 신용리스크 비용이 무려 3,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그리스 국채(신용리스크 비용: 560억 유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국채(240억 유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1,240억 유로), 위기국 은행권에 대한 유럽은행들의 익스포

★ 위기국 은행권 및 국채에 대한 각국의 피해 규모

(총 자산 대비 %)



주: 위기국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IMF, GFSR

저(약 1,000억 유로)를 통해 피해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6조 5,000억 유로 가운데 CDS 프리미엄이 200bps를 상회하는 국채의 비중은 2010년 4월 5%에서 2011년 8월 46%로 증가하는 등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위기국의 은행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권은 미미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개별 은행들의 피해규모를 비교해보면 위기국 은행들이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피해규모가 핵심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인 은행이 전체 90개 은행 중 22%를 차지했으나, 이들 은행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유럽 은행권의 피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험업체 등 여타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규모와 신용경색에 따르는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하면 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그리스 디폴트 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위기상황에 근접해 있는 여러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여력이 없다.

유럽은행들의 금융위기 해결책 논의 확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의 대표은행들은 재정상황이 건전하므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이후 유럽은행들이 이미 4,200억 유로의 추가 자본을 확충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고, 9월 중순에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행들에게 자본확충 계획을 앞당기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차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여덟 개 은행들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핵심자기자본비율이 5~6%로 위험 수준인 열여섯 개 은행들은 2012년 4월까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유럽은행들과 EU 집행위원회의 자신 있는 입장표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며 9월 말 은행 주가가 반등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은행 추가 반등에 한 몫했다. 더불어 유럽투자은행(EIB)이 EFSF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위기국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며 시장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했다. 또한 10월에는 ECB가 커버드본드 매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공부문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안전채권으로 디폴트 시 채권자들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2011년 금융시장 리스크가 증가해 선순위 무보증채권 발행이 어려워지자 유럽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커버드본드의 시장규모는 아직 작은 편이지만, 유럽은행권에서 중요한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ECB는 2009년 5월에 600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향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FSF 확대안이 17개국에서 모두 통과되어 이제 EFSF는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각국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행권의 향후 과제

2011년에 발생한 유럽 금융시장 불안은 EU 수장들이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해 발생한 결과물이다. 긍정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의 원인이었던 투자자들의 불신이 위기국 지원 방안과 은행 자본확충 계획 마련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FSF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는 부분적 디폴트가 됐든, 질서 있는 디폴트든 채무 탕감이나 상환일자 연기가 불가피하다. 2차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의하면 민간채권단은 이미 21%의 채무 탕감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재정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국들의 국채상환이 만기되는 시점을 전후로 금융권 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FSF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로지역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구제금융 확대안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은 부실은행의 자본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최악의 상황, 즉 회원국 탈퇴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칼럼을 통해 현재 유럽 재정위기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좋은 해결책은 더 이상 없다. 제안되고 있는 방안들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붕괴와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구제방안에 따르는 위험은 불

가분의 통화동맹을 성급하게 추진했고, 심각한 수준의 역내 불균형을 용인했으며, 은행들을 규제하는 데 실패하였고, 재정위기에 무능력하게 대응한 데에 따른 비용이다.” 유럽의 은행들과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따르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2013년부터 단계적으

로 시행될 바젤 III의 자기자본의 질과 양 강화, 완충 자본 비율,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규제 등을 문제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U 법제도 개혁의 함의

The meaning of reforming the EU's legal institutions

When the EU adopted the Lisbon Treaty on the 1st of December, 2009, it showed its continued efforts to strengthen the integration process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EU had been a sui generis organisational entity before the Lisbon Treaty entered into force. Now, the EU is a political and legal entity and its external actions are expected to be more coherent. This is going to make the EU a more effective and prominent actor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EU has also improved its governance system with major changes in how its judicial institutions operate. The pow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Treaty yet it is still weaker tha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Council's. As a result, it can be viewed that the driving power of the EU integration is based on the rule of law rather than on democratic principles. With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the EU is trying to overcome the criticism of a lack of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view of democratic principles by providing various solutions based on the rule of law.

리스본조약 발효로 이어진 EU 통합 의지

EU의 통합은 국가 단위의 통합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독일의 재무장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출범을 한 EU(당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정치적인 수준으로까지 통합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EU 차원의 헌법 제정 시도로 구체화되었었는데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EU 통합의 불씨는 개혁조약(Reform Treaty)으로 되살아났고, 결국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통합의 의지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리스본조약에서는 유럽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국가·국가 규정, 공휴일 규정,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규정까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EU의 통합이 정치적인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그간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로 평가를 받았던 EU가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법인격을 직접 보유하게 되었고, 대외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EU의 통합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EU 통합

EU의 통합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EU가 통합의 주요 원동력으로 법치주의(rule of law) 원리를 채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애초부터 EU가 법치공동체(a community based on the rule of law)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¹ 실제로도 통합의 물꼬를 튼 것은 1차적인 법원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EU는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차적인 법원으로 여겨지는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정치공동체의 설립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결국 EU 차원의 법치주의가 EU 통합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 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법치주의의 강화

EU는 줄곧 법치주의 하에서 자신의 통합을 도모해왔다. 법치주의의 요소로 '성문 헌법의 우위성 확보, 권력 분립의 원리, 규범통제제도를 포함한 사법심사제도'를 들 수 있는데, EU도 이와 같은 법치주의 요소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¹ 이와 같은 사항은 특히 다음의 판례에서 선언되었다. Case 294/83, *Parti écologiste 'Les Verts' v. European Parliament* (1986) ECR 1339 at 1335 (paragraph 23 of the judgement); Opinion 1/91, *First EEA* (1991) ECR I-6069 at 6102(para. 21).

법치주의 요소 중 특히 사법심사제도가 법치주의원리의 확보에 상당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인(私人)의 사법제도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EU 역시 이를 보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과거 EU 조약 제230조에 따르면,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은 자신에게 가하여진 결정(decision)²에 대해서 또는 제3자에 대해 발하여진 규칙(regulation)이나 결정(decision)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국제적 수준에서는 사인에게 당사자적격(standing, locus standi)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EU차원에서의 사인의 당사자적격 인정은 EU가 법치주의 차원에서의 통합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합 노력은 리스본조약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EU 사법재판소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발하는 연합의 조직(bodies), 사무국(offices), 그리고 기관(agency)이 행하는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당해 조건 아래 자신에게 시달된, 또는 자기와 직접적·개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나아가 자기에게 직접 관계되는 실시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리스본조약 제263조, EU 운영에 관한 조약). 이는 사법심사 절차에서 피고로서의 EU 기관 혹은 조직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리스본조약은 EU 법질서 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결적 부탁제도의 심사 대상을 EU의 단체, 조직, 사무국 그리고 기관 행위의 유효성과 해석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권력

² EU의 입법유형에는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칙(Regulation), 결정(Decision), 지침(Directive)과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의견(Opinion), 권고(Recommendation)가 있다. 유럽헌법에 입법행위의 단순화 작업이 이루어져 구속력이 있는 EU법(European Union Law), 골격법(Framework Law), 결정, 규칙과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의견, 권고로 입법행위의 유형을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유럽헌법의 부결로 기존의 입법행위 유형이 유지되고 있다.

분립 원리를 채택·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 확립에는 EU 사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사법재판소는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를 통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EU 법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원리를 적용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EU의 통합에는 법치주의원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EU 사법재판소가 주도하는 EU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U 통합의 동력은 법치주의

국가를 운영할 때 법치주의의 기반 하에 민주주의 원리가 확보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치주의 원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EU'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통상적으로 '국민의 자기지배·자동성 원리'라고 정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의회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EU 역시 민주주의 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의회 즉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기능과 지위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공동결정절차가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규정되면서(운영조약 제289조 제1항 및 제294조) 유럽의회는 일정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회와 의회의 협력적인 구조 덕분에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위원회에 대한 통제 권한(제290조 제1항, 제2항), 예산권한(운영조약 제314조), 무역정책과 국제조약에 대한 동의 권한(운영조약 제207조 제2항, 운영조약 제218조 제6항) 그리고 조약 개정권한(운영 조약 제48조 제3항 제2절) 등을 통하여 그 권한이 전반적으로 고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입법절차를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유럽의회의 지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만은 없다.





리스본조약이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특별입법절차(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그리고 개별 입법절차(individual legislative procedure) 등을 통하여 입법절차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회는 여전히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인 위원회와 이사회의 권한에 비하여 유럽의회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다.

나아가 EU의 회원국들도 유럽의회에 지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효율적인 입법화와 관련되는 사항일 뿐이지 EU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고양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국 EU는 여전히 통합의 동력을 민주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부터 얻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유럽 회계감사원의 기능 강화로 법치주의 구체화

EU 통합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치주의 하에서 EU 통합'은 EU 전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된 것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통합의 동력이 담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EU 기관의 선거제도 개선 나아가 EU 헌법 제정을 통하여 EU 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개혁논의는 1차적 법원의 개정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EU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EU는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법치주의 원리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연합 차원에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회계감사원은 EU 내에서의 부정·부패 방지

와 책임감 고양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유럽회계감사원은 EU의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주 업무는 EU 재정 관리 및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에 공적 자금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의 가치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EU의 기금을 다루는 모든 사인과 기구를 감사하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회계감사원은 재정운영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럽회계감사원은 사법권한(judicial function)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사권, 체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회계감사원은 위원회의 기관인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에 부패 관련 사건을 보고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회계감사원은 EU 차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OLAF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연합 내 다른 주요 기관과의 협조에도 적극적이다. 이와 같이 당해 감사원은 이러한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자신의 제한적인 감사 기능을 보완하여 EU 차원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U 법제도 개혁은 지속적인 통합 의지의 표출

EU는 통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이나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EU의 통합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치주의 원리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관할 지역과 인구가 광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로 통합을 구체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스본조약의 법제도의 개혁이나 유럽 회계감사원의 기능 강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법치주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EU의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EU의 주도적인 통합 노력에 대하여 견제하고 있는 독일³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EU는 통합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내부적으로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EU의 예산안 발표에 대한 영국과 네덜란드를 위시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반발과 국경개방조약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 대한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부결 사례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통합, 다시 말해 민주주의 원리를 통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EU는 향후에도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통합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속 진행 중인 EU의 법제도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향후 유럽 의회에 입법권 부여, EU 차원의 선거제도 도입 등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EU 정

체성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EU 역시 통합 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다.

EU 차원의 법치주의는 우리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EU 사법제도에서 보장되는 사인의 당사자적격은 회원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EU의 조치(action)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당사자가 된 적이 적지 않다⁴. 또한 최근에 있었던 회계감사법원 문서의 접근권 보장⁵ 등과 같이 법치주의 측면에서 상당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는 EU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EU 법치주의의 개혁과 변화의 양상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³ 대표적으로 Brunner v. European Union Treaty 사건(Brunner v European Union Treaty [1994] 1 CMLR)이나 리스본조약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Lissabon-Urteil, judgment of 30 June 2009 (BVerfGE 123, 267)).

⁴ 예를 들어 최근의 Case T-497/09 LG Electronics v. OHIM (KOMPRESSOR PLUS); Case T-128/11 LG Display and LG Display Taiwan v. Commission.

⁵ Decision No 12/2005 of the Court of Audito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10 March 2005 regarding public access to Court documents.





상생의 관점에서 본 EU-러시아 가스관 분쟁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Russia: Gas pipe conflict

The EU, whose dependency on Russian gas is high, named the Turkey-Austria gas pipeline ‘Nabucco’ from the famous opera of Giuseppe Verdi. As the EU began to prepare the Nabucco project in 2002, Russia announced a rival project named ‘South Stream’ in 2007. When the South Stream project is complete, it will transport Russian natural gas to the Black Sea to Bulgaria and Italy. The conflict between the EU and Russia surrounding these pipelines can be turned into serious diplomatic problems depending on how the situation develops in the futu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neither project can be completed and be fully utilised. The EU views Russia as an uncivilised country with emotional and irrational tendencies. Yet Europe’s rational hostility seems to be based on the emotion of fear. Europe criticises that Russia’s energy policies are based on anti-capitalism and resource nationalism. Rather than approaching the conflict from a unilateral view, the EU and Russia should search for a relationship based on symbiosis.

EU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문제를 러시아의 불투명하고 불안한 정책에 내맡긴 상태이다. 2009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같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사회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EU의 탈러시아 추진은 계속되어 왔다.

오페라에서 이름을 따온 대형 가스관 프로젝트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 달고(Va’, pensiero, sull’ ali dorate)…”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유명한 베르디의 〈나부코〉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사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오페라인데, 바빌론에 예속된 유대인들의 해방에 대한 희구를 노래한 이 작품은 억압과 종속으로 신음하는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생명력을 구가할 것이다.

2005년 10월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프랑스 연출가이자 무대 디자이너인 다니엘 브누앙(Daniel Benoin)은 〈나부코〉의 배경을 기원전 600년 바빌론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게토로 옮겨 화제를 모았다. EU와 동양, 바빌론의 시대와 나치의 시대라는 거대한 시공의 경계를 파괴할 정도로 생명력을 가진 이 작품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6년 6월, 다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다만 이제는 카스피해를 관통하여 EU으로 이어

지는 거대한 가스관 프로젝트로 말이다. 이 가스관은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로 이어지는 길이 3,300킬로미터의 대형 가스관인데, 카스피해 지역과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를 연간 310억 세제곱미터가량 실어 나를 계획이다.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대형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가스관 프로젝트에 오페라 〈나부코〉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천연가스 공급을 다양화하려는 EU의 노력, ‘나부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변신한 오페라 〈나부코〉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종속으로부터 탈출하려는 EU를 상징한다. 유대인 노예의 역할은 EU가, 압제자 바빌론의 역할은 러시아가 담당하는 21세기형 〈나부코〉의 서장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구소련 시대부터 EU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러시아에 상당부분의 천연가스를 의존해왔다. 2010년 BP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몰타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EU 25개국의 러시아 PNG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36.9%에 이른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100%를, EU의 경제를 주도하는 독일도 EU 평균을 상회하는 37.1%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가 시베리아 관통 가스관 프로젝트

(우렌고이-포마르-우췌고로드)가 정치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월 7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EU행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자 EU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EU는 그 충격으로 인해 2006년에 시작되었지만 지지부진했던 나부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유대인을 자처하는 EU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압제에서 탈출할 출구를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압제자였던 옛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부코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남류’

그러나 EU가 시적인 이름의 ‘나부코’를 출범시킨 이후 1년 뒤인 2007년 6월에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는 지극히 산문적인 이름의 프로젝트 ‘남류(South Stream)’을 출범시켰다. 남류는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흑해를 거쳐 불가리아에 상륙한 후, 한 갈래는 그리스-이탈리아 남부로, 다른 한 갈래는 헝가리-세르비아-이탈리아 북부로 이어지는 총 길이 900킬로미터, 연간 63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관이다. 공식적으로는 구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우크라이나, 터키 등 이른바 가스관 통과국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EU는 나부코 프로젝트를 붕괴하려는 음모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후 몇 년간 간헐적으로 지속된 나부코-남류 갈등은 2011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소치에서 푸틴 총리의 입회하에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이탈리아 ENI, 프랑스 EdF, 독일 바스프(BASF) 등이 지분 할당(각각 50%, 20%, 15%, 15%)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동 사업 협정에 조인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자 EU는 보다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EU 집행위의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인 귄터 외팅어(Gunther Oettinger)는 “러시아로서는 연간6,000

억 세제곱미터의 30%가 연간 4000억 세제곱미터의 40%보다 나올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의 장기 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나부코와 남류를 둘러싼 EU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향후 그 전개 상황에 따라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안게 되었다.

EU와 러시아 모두 상대의 동의가 필요

현재로서는 EU와 러시아 양측이 모두 상대의 프로젝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살기를 보유한 상태다. EU는 다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첫째, ‘에너지 연료 수입쿼터 상한제’다. EU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입 시 개별 항목당 한 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총량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석유는 중동으로부터 44% 이상을, 천연가스는 러시아로부터 4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어 아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미 법제화된 상태라 언제든지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둘째, 이른바 ‘제3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로 gas와 전력 판매국이 수송관까지 소유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다. 이는 2007년에 제안되고, 2009년 초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남류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손을 떼야 한다.

셋째, ‘창구 단일화(Speak with one voice)’ 규칙으로 EU 소속 국가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수출입 계약을 할 수 없고 오직 EU라는 하나의 주체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2011년 말에 최종 결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과되면 구매자 카르텔이 형성되어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도 이에 못지않은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나부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약점인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의 협정 문제를 무기로 내세웠다. 나부코 가스관의 핵심은 투르크메니아 가스를 카스피해



를 통해 공급하는 것인데, 이 카스피해 공유를 둘러싼 법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결되더라도 나부코 프로젝트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현재 북카스피해 연안국인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간에는 ‘해저 분할, 해수 공유’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남카스피해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아 간에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 사항 없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카스피해 전체적으로는 2011년 가을에 또 한 차례의 전체 연안국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아의 입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나오는 가스관이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문제는 해수 공유 원칙에 따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나부코 가스관이 카스피해를 통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 러시아와 EU의 가스관 프로젝트는 양측의 허락 없이는 어느 한쪽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념적’ 러시아에 대한 ‘이성적’ EU의 비판적 평가

그렇다면 팽팽한 대치전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 평행선은 단지 가스관에만 국한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립은 862년 러시아 탄생 이후 EU와 러시아 간에 천년 넘게 지속되어온 역사·문화적인 갈등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르베르트 엘리야스(Norbert Elias)는 자신의 대표작 『문명화의 과정』에서 문명화 이전 단계의 특징으로 이성이 아닌 정념의 발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EU는 러시아를 항상 문명 이전의 상태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념적인 야만국으로 규정해왔다. 러시아는 문명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덜 문명화된 나라이기에 EU의 문화적, 도덕적 우월감에 근거한 이분법적 평가 원칙 즉 “이성적 EU는 옳고 감정적인 러시아는 틀리다”라는 원칙이 EU의 대러시아 외교 노선을 지배하고 있다.

이성과 감정,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라는 대립 구도는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EU의 비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 대장균 감염 방지를 위한 EU 채소 수입 전면 금지 등을 EU에서는 비합리적인 과잉 조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여배우 나탈리아 자하로바(Natalia Zakharova)의 모권 복권 소송은 EU의 이런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남자와 이혼한 러시아 유명 여배우에게 양육권을 빼앗고 제3의 가족에게 그 딸을 강제 입양시킨 프랑스 법원은 ‘모성의 과잉’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이후 모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프랑스로 돌아간 나탈리아 자하로바는 오히려 남편을 방화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고, 최근 러시아로 이송된 후에야 러시아 대통령이 사면해주었다. EU의 이성은 러시아 여인에게서 ‘모성과 감정의 과잉’이라는 죄목으로 세 살된 딸을 15년간 빼앗았고, 그녀의 감정적 호소를 부추겨 결국 형사범으로까지 만든 셈이다.

EU의 이성, 민주, 시장 원칙도 한계

사실 EU의 이러한 입장에는 러시아를 야만적인 아시아 특히, 몽고의 연장으로 보는 일종의 황색 공포증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에 대한 거인공포증이 내재되어 있다. 1917년 이후 이 황색 공포증은 적색 공포증으로 바뀌었고, 1991년 이후로는 거대 자원 공포증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적 감성에 대한 EU적 이성의 적대감은 사실 공포라는 또 다른 감정의 과잉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EU는 이 공포라는 감정을 문명적 우월감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했을 뿐이다. EU 역시 그리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근거는 사실 충분하다. 러시아의 감정 과잉의 대표 주자인 16세기의 이반 뇌제(雷帝)에 못지않은 영국의 살인광 헨리 8세와 스탈린의 대숙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홀로코스트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EU 이성의 최대 지표로서 러시아 비판의 근거가 되는 민주, 자유, 인권 등의 잣대로부터 EU도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EU 내 이슬람인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슬람 여인들의 히잡 착용 금지는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권보호 정책 같지만 사실상 이슬람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반인권적 폭력이다. EU 재정위기의 원인을 이슬람인 탓으로 돌리는 극우파의 득세, 영국에서 벌어지는 난동 사태는 EU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톨레랑스가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시장적 정책에 대해서도 EU는 러시아와 다를 바 없이 반시장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 가즈프롬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EU가 대응책으로 구매자 독점(카르텔) 정책을 내놓은 것이 그 예다. 이처럼 EU 또한 사실 그리 이성적이지 못함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이성과 감정, 문명과 야만의 대립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생하려는 의지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

EU는 가스관 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반시장주의적 자원민족주의로 간주하고 EU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 일면적이다. 우선 러시아는 1993년 이후 EU의 확산 정책으로 옛 동맹국들과의 기존 조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매년 1억 5,000만에서 3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가스 단절을 초래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스 분쟁에는 EU의 확산 정책에 부응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기대 심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가스 단절에 의해 러시아도 EU 못지않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러시아 가스관 단절의 리스크는 어느 일방의 비이성적 정책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러시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EU의 이성중심적 권위주의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려는 러시

아를 비판하는 동시에 비록 비민주적 성격이 다분하지만 엄연한 정책 수행자로서 현재의 러시아 정부와 그 정체를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옐친 정부 이후 러시아 국민이 스스로 푸틴 정부를 선택했고, 그 결과 안정과 질서 속에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즉, 러시아는 EU와 다른 자기 고유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만일 가스관 문제의 원인이 러시아 정부의 반시장적 독점 정책과 비민주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면 EU의 민주주의를 전하기 위한 상호 소통의 문을 개방하고, 이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가스관 분쟁을 계기로 EU와 러시아의 소통 도약 가능성

러시아의 천연 가스관은 한편으로는 분쟁의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러시아의 소통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바이오가스,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류와 나부코의 공생이 불가피하다.

남류와 나부코 둘 다 그 최종적 실현을 위해서 공히 부딪쳐야 할 주요 변수인 터키가 기다리고 있다. 터키 해상 통과를 위한 협상에서 터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러시아와 EU의 협력이다. 나아가 가스관을 계기로 한 EU와 러시아의 공생은 작금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EU와 러시아는 더 이상 세계 무대의 유일한 큰손이 아니다. 중국, 인도, 동아시아, 중남미의 부상으로 세계는 이제 군웅할거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며, 특히 최근 미국과 EU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서서히 신흥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로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전포고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상호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U과 러시아의 ‘운명의 힘’이 필요

이제 EU과 러시아는 〈나부코〉가 아니라 베르디의 또 다른 작품인 〈운명의 힘〉을 빌려야 할 때다. 이 작품은 갈등이 지속될 때 초래될 공멸의 비극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 전 EU과 러시아의 힘이 합쳐져서 더욱 시사적이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황실 극장과 계약한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는 스페인 작가 마누엘 리바스(Manuel Rivas) 공작의 희곡 〈Don Alvaro, o La Fúelxa de Sino〉를 이용해 〈운명의 힘〉을 만들었다. 마누엘 리바스 공작은 영국 작가 월터 스콧(Walter Scott)의 영향을 받았으며, 등장인물 피아베(Piave)의 리브레토는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실

러(Friedrich Schiller)의 〈Wallenstein’ Camp〉를 원용했다. 1862년 러시아 황실 극장에서 초연할 때 러시아 황실 근위 연대 합창단, 러시아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테너 엔리코 탐벌리크(Enrico Tamberlik)와 소프라노 바르보(Carolina Barbot)가 참여하여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러시아의 시인 표도르 이바노비치 주체프(Fedor Ivanovic Tjutcev)는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믿어야 할 뿐’ 이라고 노래한 바 있다. EU도 러시아의 이성이 아니라 그 존재를 믿고 〈나부코〉를 넘어 〈운명의 힘〉으로 가야 할 것이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유로화의 현재 위기는 재정동맹의 기회

Now is the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eurozone fiscal integr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s recently released a working paper ‘A Fiscal Union for the Euro: Some lessons from history.’ The paper looks at the political and fiscal history of five federal states (Argentina, Brazil, Canad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on fiscal system that could have alleviated the consequences of the recent crisis in the eurozone. The paper concludes that three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rom these past events. i) Many independent regions decided to found a union because they needed a common defence or a desire to be independent from foreign nations. ii) Institutional developments were driven by exceptional events such as the Great Depression. iii)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well-functioning and poorly functioning federal states. Learning from these past events, the eurozone should capture this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fiscal integration by through unity and leadership.

미국 국가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역사에서 배우는 유로화 재정동맹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동맹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 유로지역 위기에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유로화에 대해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서로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도 분분하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재정동맹을 이루었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유로화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새로운 측면을 분석하였다.

다섯 국가의 재정동맹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째, 재정통합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의 재정통합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아르헨티나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몇 개주가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정통합의 역사는 언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통합 없이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즉 ‘통합정신(federal spirit)’이라고 지칭하였다.

둘째, 재정통합 사례의 공통점은 재정통합이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대공황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중앙정부가 집중화된 재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상황에서 중앙은행을 설립했다. 또한 이례적인 경제위기는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이후의 경제위기에도 좋은 선례로 남는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독립 전쟁 중에 발생한 상당한 양의 주정부 채권을 연방정부로 통합하였고, 이를 장기 국채 전환과 중앙정부 세수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는 주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훌륭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세 번째 역사적 교훈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부채 관리의지가 재정동맹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은 성공한 재정동맹으로,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성공적이지 못한 재정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840년대 미국정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흡수한 후 중앙정부는 더 이상의 구제금융(bailout)은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혹은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1980년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중앙정부가 재정원칙을 거스르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써 중앙정부마저 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현재 EU의 위기에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에서 재정통합은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일과 같은 건전 회원국이 재정동맹을 오히려 손해라고 느끼는 것과 그리스와 같은 위기 회원국이 통합 재정에 무임승차하려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통합 없이는 공멸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전달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두 번째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는 EU의 현재 위기가 재정동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공황을 겪으며 여러 나라가 재정통합을 이루었듯이 말이다. 따라서 현재 EU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통합 재정의 원칙과 예산 부담, 세금 조달, 감사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ECB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유로본드의 실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세 번째 분석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각 회원국의 재정당국에 EU의 통합재정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적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EU는 원칙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구제금융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구제금융 지원이 시작된 회원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직

재정통합을 이루기 전 단계이므로 각 회원국 재정 담당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개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해결책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의 위기는 EU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통합의 기반이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는 징후도 보인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EU는 더욱 강력한 재정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재정동맹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구제금융안을 더욱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회원국이 세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예산 운영을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고, 유로본드를 활용하여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EU는 현재 성공한 “강력한 재정통합의 길”을 갈 것인가, 성공하지 못한 “낭비하는 재정통합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역사의 문 앞에 다가서 있다. (자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1, 9.). A Fiscal Union for the Euro: Some Lessons from History.)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12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The 12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On the 30th of August,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12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with Professor Kim Sang-Keun giving a lecture on the ris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He gave a talk on the reasons behind the rise and fall of the Empire and on the lessons that modern business managers can learn from these events. Also, he showed that the common history of the Roman Empire is one of the main drivers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even Europe went through numerous wars and conflicts. He explained that the EU is not simply an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 but also a society with a complex and strong root where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interact with each other.

Following the lecture, participants discussed about the mea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effect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y agreed that the current problem is severe, but Europe will be able to solve it as they did when they previously faced other obstacles. They agreed that the key is the political will of the leaders for strengthening the integration process while compromising with each other.

지난 8월 30일 연세-SERI EU센터는 김상근 연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제12회 EU Core-Circle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상근 교수는 로마제국의 역사와 붕괴 과정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로마제국의 역사는 EU가 오랜 전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유럽 통합의 역사는 단순한 경제,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 여러 인종과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그 뿌리는 매우 복잡하고 단단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현재 유럽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다 시금 유로지역의 붕괴가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원동력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위기가 과거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볼 때 극복하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던 유럽인들의 경험을 생생한 시청각 문화 자료를 통해 나눌 수 있었다.



우수 논문 장학증서 전달식 Outstanding Dissertation Award

The Yonsei-SERI EU Centre supports Masters and Ph.D students' research projects on Europe by awarding outstanding dissertations. This year, Dr. Kim Yong-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r. Choi Hee-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the award and they gave a brief presentation on their research on the 30th of August. In their outstanding research projects, Dr. Kim analysed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in the EU Law and Dr. Choi analysed the EU's language and cultural policies and tried to apply them to Korea's French language education system.

연세-SERI EU센터는 EU에 대한 석/박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 학위 논문을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훈 박사(서울대)와 최희재 박사(서울대)는 8월 30일 삼성경제연구소 510호 회의실에서 논문 주제를 발표하고, 장학 증서를 수여받았다. 서울대 법과대학의 김용훈 박사는 EU의 규범통제제도를 선결적 부탁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대 외국어교육과의 최희재 박사는 EU의 언어, 문화정책 고찰을 통한 프랑스어 통합 교육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행위중심 접근의 한국 프랑스어 교육 현실에 적용하였다. 수상자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EU의 법과 교육 제도를 연구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유용한 연구 조언을 해주었다.



EU 아카데미 출범 Launching of the EU Academy

The Yonsei-SERI EU Centre is running the EU Academy which will invite experts on Europe and managers from European companies to give lectures to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run a number of projects related to European companies. The sessions are being held on every other Saturday. The EU Academy aims to improve the research environment for students interested in the EU and the Centre believes that it will contribute in educating future EU experts. A total of 220 students applied to join the EU Academy and 60 students have been selected for this term's programme. We are giving students an opportunity to attend lecture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institutions, history and law of the EU. On the 3rd of September, Professor Choi Jin-Woo of Hanyang University gave the first lecture of the programme on the history of the EU integration and Yun Jae-Chun of KOTRA (Europe and America Division) gave a lecture on how Korean corporations are entering the European Market. On the 1st of October, Choi Ho-Sic, the CEO of Best Network, gave a lecture on how to prepare CVs and Dr. Kim Deuk-Kap gave a lecture o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the EU. Dr. Park Duck-Young finished the second session by giving a lecture on the EU law and the Lisbon Treaty.

In next sessions, we will invite more EU experts and professors such as Kim Hyon-Jin, the CEO of BMW Korea, Dr. Park Young-Reoyl of Yonsei University's School of Management. Those students who successfully complete the EU academy's programme will be given a certificate and the EU Centre will give an opportunity to best performers of doing an internship at various European companies

연세-SERI EU센터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EU와 유럽 기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EU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는 EU 아카데미는 EU 전문가와 국내 주재 유럽기업 대표들이 강사로 나선다.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진행될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유럽연합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 아카데미에 대해 공고를 하자 전국에서 22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그중에서 6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EU 회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EU 통합의 역사, 제도, 기구, 법 등 EU에 대한 포괄적인 강의를 들은 후, EU 전문가 및 기업대표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EU 시장분석기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9월 3일에 열린 EU 아카데미의 첫 수업에서는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가 EU 통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강연을 해주었고, 이어 윤재천 KOTRA 구미팀 처장이 EU 시장의 한국기업 진출 방법 및 현황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이어 10월 1일에는 최호식 베스트네트웍 대표가 영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 강연을 하였고,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이 EU의 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이어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가 EU의 법 체계와 리스본 조약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 외에도 김효진 BMW코리아 대표,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의 유럽기업 대표, 컨설턴트, EU 시장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포함되어 있다. EU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유럽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차세대 EU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한다.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 탐방 보고회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briefing session

During the last summer holiday, the Yonsei-SERI EU Centre visited Belgium on a 4-day long field trip. The second Brussels Immersion trip gave an opportunity for selected students to visit a number of EU institutions and a chance to listen to experts in many different areas. The purpose of the trip was for students to learn about the EU integration process and deepen their knowledge on the EU institutions. A total of 20 students joined the field trip and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when they carried out their own projects.

On the 19th of September, the EU Centre held a briefing session and the students presented the results of their projects and had discussions. The topics of their projects included cultural policy, law system, integration process, human rights and business management. Copies of their reports are on the Yonsei-SERI EU Centre's website and the summaries of two outstanding reports are in this month's EU Brief. The Centre asked the students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EU related activities and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others.

연세-SERI EU센터는 지난 여름방학에 3박 4일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소수의 학생들이 브뤼셀 현지에서 EU 기관들을 방문하고 담당자의 강의를 들으며 현지에서 그룹별로 준비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19일에는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다시 모여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고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보고회에서는 총 7개의 팀이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제는 EU의 문화정책, 사법제도, 통합 노력, 인권, 비즈니스 사례 분석 등 다양했다. 보고서 원문은 EU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우수 보고서 두 편은 이번 EU Brief 10월호에 게재되었다. 또한 EU센터는 학생들이 이번 탐방에서 보고 겪은 EU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EU Society 등의 모임을 통해 이를 장려할 계획이다.



EU SME 포럼 EU SME Forum

On the 22nd of September, the Yonsei-SERI EU Centre established the EU SME Forum to give lectures to managers from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o do not have wide access to information.

The topic of the first SME Forum was the Korea-EU FTA, which came into force in July, 2011. The first lecture was designed to giv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market to Korean exporters.

Choi Dong-Kyu, who is in charge of FTA policie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gave a lecture on the meaning of the Korea-EU FTA. He explained the reasons behind the rising number of FTA agreements and how Korean companies should prepare in the FTA era. Also, he explain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ing mechanisms for companies. Lastly, he talked about how Korean firms can utilize the agreement in a beneficial way and the lecture was followed by an active discussion on trade related issues.

연세-SERI EU센터는 EU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연을 진행하는 EU SME 포럼을 기획하여, 지난 9월 22일 첫 걸음을 내딛었다.

EU SME 포럼은 한-EU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어 유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보접근이 쉽지 않았던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EU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EU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강연 프로그램이다.

EU SME 포럼의 첫 강연은 외교통상부 최동규 FTA 정책국장이 맡았는데, 한-EU FTA와 그 함의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의에서 최동규 FTA 정책국장은 현재 FTA 확산의 원인과 증가 추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세계적 추세인 FTA증가 속에서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문제들과 한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개별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답게 포럼에서는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과 토의가 이어졌다.



연세-SERI EU센터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의 프로젝트 보고서 중 우수작 두 편을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보고서는 학생들이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기획,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자체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모든 보고서 원본은 EU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uring the last summer holiday, the Yonsei-SERI EU Centre visited Belgium on a 4-day long field trip. Students carried out their own projects and the summaries of two outstanding reports are as follows.

Brussels Immersion Fieldtrip Report 우수작 1

유럽사법재판소와 EU 집행위원회 통상 총국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We decided to visi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and then to interview an expert on Korea at 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t the ECJ, we talked to a lawyer who told us about the case that he defended in thatmorning and we could observe a trial regarding an interpretation of the EU law by the Supreme Court of Italy. The next day, which was the day on which the Korea-EU FTA was ratified, we interviewed Mr. Peter Berz at the DG Trade, who was in charge of bilateral trade relations with South Asia, Korea and ASEAN and we could learn about the FTA negotiation processes.

적극적으로 두드려 탐방 일정 조율 성공

우리 팀은 2010년 외교부 주최 제1회 WTO/FTA Moot Court에 한 팀으로 참가하여 준우승을 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두 EU의 법과 통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탐방지를 선정하는데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주브뤼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 통상 관련 로펌 등을 탐방지로 염두에 두고, 개인적인 방문이 가능한지, 일정이 맞는지 등을 고려하여 탐방장소를 최종 선택하였다. 결국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를 방문한 후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총국(DG Trad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한국담당관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브뤼셀로 탐방을 떠나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방문기관과 연락을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대부분 사적인 방문을

불허하거나 단체가 아닌 소규모 그룹의 방문을 불허했고 어떤 곳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방문기관의 허가를 얻어내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ECJ는 미국 시튼홀(Seton Hall) 로스쿨 학생들의 단체 프로그램 일정이 우리와 맞았고 담당자가 호의를 베풀어 내부 투어를 할 수 있었다. DG Trade는 담당관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구글링 등을 통해 알아낸 후 독일인이라는 점에 감안하여 독일어로 연락을 취했고 겨우 인터뷰 일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EU 기관을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방법을 모색하기를 권한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은 결국 한국 밖에서도 통하는 것 같다.

유럽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공판 참관

ECJ의 기원은 1952년에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개별 재판소에서 찾을 수 있다. ECJ는 위 세 개의 공동체를 통

합한 유럽공동체가 발족하자 1958년 독립적이고 통합된 재판소로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의 가입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었다. 현재는 27개국으로 늘어났다.

ECJ는 EU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사안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EU에서는 유럽의회나 유럽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 등의 기관이 법률을 제정 및 집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로마조약이나 마스트리흐트조약 등 EU의 기본 조약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ECJ가 EU 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배타적인 해석 권한을 행사한다. 즉, 한 나라의 국내법이 헌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적합성 심사를 하지만, EU 법을 회원국의 재판소가 판단하면 그 판단이 EU 전체적으로 통일된 판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고도의 정치적 결정과 가맹국 간의 정치적, 상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을 맡고 있으며, 그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우리는 이들간의 단체 일정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기차를 타고 룩셈부르크로 향했다. 어두운 저녁에 룩셈부르크에 도착하여 호텔에 묵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ECJ 방문 일정이 시작하여 매우 힘들었으나, 다행히 룩셈부르크가 워낙 소도시라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막상 도착해서 본 ECJ의 건물은 기존의 생각과 달리 고색창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황금빛의 현대식 건물이어서 흥미를 자아내었다.

오전 8시 30분에 재판소 안내 담당관을 만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방문증을 받았다. 시튼홀 로스쿨 학생들 외에도 우리와 일정을 함께하게 된 필리핀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이 변호사는 M&A 변호사로 활동하다 뜻한 바가 있어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방문 프로그램 못지않게 유익했다.

이후 30분간 ECJ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오전에 참관할 공판의 사건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탈리아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과 관련하여 EU 법 해석

이 문제가 된 사건의 공판을 직접 참관하였다. 공판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였다. 당사자 측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측 변호사들이 이탈리아어로 변론을 펼쳤다. 재판관들은 불어와 영어로 질문을 하고 통역실에서 동시통역사들이 번역해주는 말을 들으며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정 양측에는 EU의 공식 언어별로 통역실이 있는데 그 규모가 굉장하다. EU 회원국이 더 늘어나면 통역실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재판정을 굉장히 높게 설계했으며 언제든지 통역실을 증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언어 문제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EU 회원국이 늘어나면 그러한 문제가 더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이 EU 통합을 향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판이 끝나고 ECJ 소속 변호사들에게 ECJ의 업무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ECJ 건물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한-EU FTA 발효일에 한국 무역 담당자 면담

DG Trade는 EU 집행위원회에 속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하에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며,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또한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이 같은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U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EU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특히 공동 정책 및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과 관련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중 무역, 특히 남아시아, 한국, 아세안과의 양자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 버즈(Peter Berz)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ECJ를 견학한 후 저녁에 브뤼셀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조금 헤맨 끝에 샤를마뉴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 건물에 도착했다. 로비에서 방문을 허가하는 스티커를 받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피터 버즈가 로비로 와서 우리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공로게도 그를 만났던 그날이 한-EU FTA의 발효일(7월 1일)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바빠 보였고, 인터뷰 예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다.

우리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EU가 기대하는 바를 물어보았다. 그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성 제고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버터, 치즈 등 유제가공품과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방송,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궁금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

한 질문에는 그가 외교관이라서 그런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예컨대 한-EU FTA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향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고려해서인지 전혀 없다고만 대답해서 다소 아쉬웠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만나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상황이었다.

한 시간에 걸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터뷰를 끝내고, 출국길에 면세점에서 준비해 간 한과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왔다. 오후에 안호영 대사님이 오시면 같이 먹겠노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바쁜 분의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사그라졌다.

강승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석사과정
이영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통상법전공 석사과정
장선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과정

Brussels Immersion Fieldtrip Report 우수작 2

하나의 유럽! 하나의 문화? - EU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

EU's cultural policies

The proportion of the EU budget that goes towards cultural policies is limite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for the question “is there a European identity in the EU’s cultural policies?” we decided to interview Sylvain Pasqua, a Policy Officer at the Directorate 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we contacted Marie Paule Roudil, who is the head of the UNESCO Liaison Office in Brussels, for his view. In order to observe the view of ordinary citizens, we visited the Ghent Conservatoire de Musique and carried out interviews with students. After this field trip, we could learn that the EU is trying various experiments to develop their cultural policies.

“만일 내가 다시 통합의 역사를 써야 한다면, 이번에는 문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 장 모네(Jean Monnet, 1976)

유럽 통합의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

유럽의 금융위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유럽이 ‘통합 피로증(integration fatigue)’을 함께 느껴가는 동안 유럽은 어느 새 위기와 분열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전 대륙을 무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들의 비옥한 예술적 토양과 다양함 속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는 유럽의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우리 팀원들은 EU의 경제와 정치 통합에 치우쳐 있던 그동안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문화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세-SERI EU센터의 Brussels Immersion Fieldtrip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팀원들은 브뤼셀로 떠나기 전, EU의 문화정책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의문점들을 정리해나갔고,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EU 문화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유럽의 정체성과 문화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EU의 문화정책은 예산으로 미루어볼 때 그 비중이 미미하다.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 등이 각각 1960년대에 공동체 정책으로 채택된 것에 비교하면, 문화정책은 199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공동농업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이 EU 총 예산의 40% 이상에 달하는 데 비하여 문화에 배정되는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문화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EU의 정책담당자들은 각 회원국의 다양성(Diversity)을 존중하면서도 각종 공동체 정책을 이용해 공동체의 통일성(Unity)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실시한 조사를 분석해보면, ‘유럽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회원국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럽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인위적인

¹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C) (2001), How Europeans See Themselves: Looking through the Mirror with Public Opinion Surveys, European Documentation. (박성훈, 윤성원, 김장호 (2008). “EU 문화정책의 유럽 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SNU-KIEP EU연구센터. p.36에서 재인용)

문화정책이 실제 유럽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허수아비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¹

과연 유럽 정체성은 존재하는가. 오랫동안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고, 작은 지역으로 쪼개져 있는 유럽의 특수성을 생각해볼 때 중앙 집권적인 체제, 즉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유럽 소속감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연합을 위해 억지로 창조해낸 개념은 아닌가?

세 가지 차원에서 직접 체험한 EU 문화정책

① EU 차원에서의 문화정책

(Sylvain Pasqua, Policy Officer in European Commission-Directorate 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와의 인터뷰)

Q1. 유럽 시민으로서의 공통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것은 종교 혹은 철학입니까? 혹은 역사의 공유나 함께했던 큰 행사입니까? ‘유럽 정체성’이 존재하니까?

– 문화 프로그램은 우선 유럽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 정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낯설고 이상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개념이지만, 그에 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프랑스인이고 제 스스로가 매우 ‘프랑스’스럽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유러피안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유럽인이 된다는 것이 프랑스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유럽 사람들과 함께 동료로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럽 정체성은 인권이나 다양성 존중 등 전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하는 가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면서도 EU가 공식 언어 23개를 모두 존중하는 면에서 다른 공동체보다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존중합니다. 또한 EU가 되려면 민주주의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유럽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Q2. 문화정책에 대한 EU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U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7년간 4억 유로니까 매년 5800만 유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문화에 투자하는 돈보다도 적은 액수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EU 집행위원회 다른 부서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EU 예산의 40%가 지역 개발(structure policy)에 쓰이는 돈인데, 유럽 전역으로 배분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가난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따라잡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북부지방의 섬유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주는 것입니다.² 또한 현재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짓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문화 인프라에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European Capital of Culture)에도 지역개발 예산이 투입된다. 프랑스의 릴은 명성이 좋지 않은 도시였는데, 2007년 문화수도로 지정된 후에 지금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Q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Culture Programme)은 무엇입니까?

– 문화 프로그램은 유럽의 시민의식을 만들어나가고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참여 국가 간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07년에 시작해 2013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며, ①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을 지원 ② 문화 예술 작품/상품의 국가 간 이동을 지원 ③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습니다.

EU에는 약 340개의 지역(region)이 있는데, 각 지역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어떻게

² 최근 EU의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간 균형발전에 44%, ② 농업, 농촌개발, 환경, 수산업 등에 43%, ③ 시민의식, 자유, 안보, 정의사회 구현 등에 1%, ④ 대외관계에 6%, ⑤각종 행정비용에 6% 등으로 배분되고 있음.

예산을 쓸 것인지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EU 차원에서는 각 지역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명시하고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EU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프로젝트의 선발과 평가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닌 유럽 전체 차원의 가치를 높이는가, 서로 다른 여러 파트너와 잘 협력하는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4. 예전 문화정책(Culture 2000)과의 차별성이나 더욱 발전된 점은 무엇인가요?

– Culture 2000에는 사회경제적 목표, 문화 목표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목표가 있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큰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Culture 2007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목표만 세웠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 쉬워졌고 프로젝트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자율권을 주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기준과 목표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1년 말 Culture 2014 프로그램의 프로포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화정책도 이렇게 진화해나가는 것이지요.

②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문화정책

(Marie Paule Roudil, Head of the UNESCO Liaison Office in Brussels and UNESCO Representative와의 인터뷰)

Q1. 유네스코(UNESCO)의 EU 본부가 2011년 1월에 생겼는데, 정확히 역할이 무엇입니까?

–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네스코에서 채택하는 문화 관련 협약에 EU 회원국들이 따르게끔 인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2007년 체결된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 다양성의

추구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조, 생산, 유통 및 보급, 접근 및 문화적 표현의 즐거움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관련 사항들을 각각의 정부들이 채택하도록 로비를 하는 중입니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문화 관련 상호협정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개입하기도 합니다.

Q2. 유네스코가 제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대부분이 국가들이 문화에 예산을 써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오거나 국가 안보에 문제를 감지하면, 문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뒷전이 됩니다.

Q3. 문화정책은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앞서 언급한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지원합니다. 문화유산이 트래피킹(거래) 혹은 밀거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 관련 인력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신들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성행하면서 문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와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다양한 문화 관련 문제들이 나라별로 어떠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의 상황을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로비함으로써 지원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③ 유럽 시민 차원에서 본 문화정책

(Clarinetist Kevin Clasen(미국인)과 Pianist Leonardo Duna(슬로바키아인), 겐트 음악 예술학교(Ghent Conservatoire de Musique) 학생들과의 인터뷰)

Q1. 유럽 시민들이 실제로 EU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까?

– (Pianist Leonardo Duna)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데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일을 하기 위해 노동허가서가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EU 국가에서 왔는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EU 국가에서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일을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슬로바키아인인 저는 은행 업무 등 복잡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2. Culture 2000과 2007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교류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EU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신가요?

- (Pianist Leonardo Duna) EU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히 한정된 장학금은 존재합니다. 예술가들 내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나 다빈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들이 서로 잘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학위를 마치겠다는 조건으로 벨기에 정부 장학금으로 유학을 올 때 1년 치가 우선 지급된 후, 행정적인 문제로 나머지 1년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스폰서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EU 문화정책은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단계

EU 문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점점 진화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유럽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EU의 문화적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은 국가 간 연계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유럽 시민의 삶에 더욱 다가서는 문화정책, 국가 간 연계가 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의 경제 격차가 문화적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문화조차 그늘 아래 드리워져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야 더 수월한 경제, 정치, 문화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언어는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EU는 각국의 다양한 언어를 존중해주고 있다. 진정한 다양성의 존중, 문화의 통합이 보이는 부분이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문화가, 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반적 인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죠” (Pasqua-인터뷰 中)

김용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김은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석사과정

정은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국제학 전공 학부과정

김혜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과정